

Online Series

2016. 05.11. | CO 16-12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 (1): 총평

김갑식(북한연구실장)

북한은 5월 6일부터 나흘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이번 당대회가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의 북한’, ‘김정은의 조선노동당’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장이자 김정은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북한이 호언장담한 ‘휘황한 설계도’는 기대에 못 미쳤고 제6차 당대회와 달리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렀다.

미래비전 제시에 실패한 ‘휘황한 설계도’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제7차 당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번 행사에 대내외의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휘황한 설계도’에는 새로운 것도 희망적인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도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국가전략으로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재확인되었을 뿐이다. 세계의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 주한미군 철수, 조국통일 3대 현장, 연방제 통일 등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대남노선이다. 경제분야에선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지만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기존에 나왔던 주장을 정리한 수준이었다.

‘선행후경(先核後經)’ 노선의 공식화

이번 당대회에서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경제·핵 병진노선의 ‘선행이나 선경이나’의 쟁점이 정리됐다. 김정은은 북한이 이미 수소탄까지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이 되었다고 강변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현 시기 경제강국 건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설정했다. 이른바 ‘선행후경(先核後經)’ 노선이 공식화된 것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김정은이 제4차 핵실험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내 차례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세계적인 핵강국의 대열에 올라섰고 미국의 핵위협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승리’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 고도화가 벌써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면 향후 핵도발 가능성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작년 말부터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조차 자강력이 거론되었고 제7차 당대회 즈음한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에서도 ‘자강력 제일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른바 ‘고슴도치형’ 정세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제재가 강화되고 중국의 대북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한 역사’라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식량의 자급자족과 설비·원료의 국산화를 통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대외무역에서 일변도 극복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개·폐막식에서 제6차 당대회 때의 ‘인터내셔널’ 대신 북한의 ‘애국가’와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연주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1980년 이후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반영하듯, 북한이 사회주의적 연대성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독자성에 매달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격적 리더십의 한계를 ‘당위원장’으로 만회하려는 의도

북한이 제7차 당대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김정은 우상화를 통한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이었다. 김정일 시기에 비해 김정은 시기에 권력승계과정과 상징조작이 빠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후계승계기간이 짧고 나이가 어린 김정은은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돌 행사, 2015년 10월 당창건 70돌 행사 등 대규모 정치행사를 통해 ‘수령’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급격히 신장시켜왔는데,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한 것이다. 김정은 우상화의 종착점은 김일성·김정일에 버금가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광명성 4호’ 발사 기록영화에서 김일성·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김정은 태양상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제 곧잘 북한매체는 김정은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치켜세우고, ‘김정은 강성대국’, ‘김정은 조선’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김정은의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자 전원은 한결같이 김정은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충성을 다짐했다.

또한 김정은은 당위원장직을 신설해 명실상부한 전 당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인격적 리더십의 부족을 제도적 리더십으로 보완하려는 의도다. 당 제1비서는 당규약상 당의 최고지도자이었지만 기형적이고 외발이 직책명이었다. 참고로 1949년 6월 남북노동당 통합시 김일성이 당위원장에 취임하였는데, 당위원장과는 별도로 당무 전반을 통괄하는 제1비서 허가이, 제2비서 리승엽, 제3비서 김삼룡 등이 있었다. 김정은의 당위원장직 취임은 당의 최고직책이 실무·집행형에서 조직·지도형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국(상무위원, (후보)위원 총28명)의 확대와 더불어 ‘당(협의체)중시 정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령제(김정은 권력집중)와 당협의체는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협의체의 실질적 작동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당 주도 정치와 안정적 세대교체

김정은은 당사업총화에서 반관료주의·반부패 투쟁을 강조하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을 시사했다. 더구나 4월 23일 노동신문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었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며 청년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에서는 노장청 배합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계적 세대교체를 추진하여 인적 충원에서 안정과 쇄신을 절충하였다. 즉, 이번 인사는 최상층부의 안정화, 상층부의 친위화, 중상층부의 세대교체 등의 기조로 추진되어 김정은 장기집권의 토대가 구축되었을 것이다. 특히 당중앙위원(후보위원)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와 비교하여 70% 이상이 신규 충원되었다.

원래 북한은 1946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북조선노동당의 당대회를 제1차 당대회라 일컬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북한 월간지 『조선』 2016년 5월호는 제1차 당대회를 1945년 10월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열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결성을 결정한 대회로 소개하였다. 당창건일과 제1차 당대회를 통합시킴으로써 당 역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제7차 당대회에는 결의권 대표자 3,467명과 발언권 대표자 200명이 참가했는데, 이것은 제6차 당대회의 3,062명과 158명보다 많다. 당대회 대표가 동일한 당원 비율로 선출되었다면 당원이 확대된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핵심당원의 수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스터리한 ‘그들만의 축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는 118개국 177개 대표단이 참가했다. 리셴넨 중국 부주석, 그리신 러시아 정치국위원, 세쿠 투레 기니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총리 등 정상급 외빈도 참석했다. 이번 당대회에는 정상급 외빈은커녕 장관급도 잘 보이지 않았다. 제6차와 제7차의 당대회 기간 노동신문 발간면수(통상 6면)만 봐도 분위기 차이가 명확하다. 1980년에는 당대회 전후 대표단과의 회담, 환영대회 등으로 노동신문의 지면이 팍 찼다.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8면 1회, 10면 1회, 12면 1회, 16면 2회, 18면 1회, 20면 2회, 24면 2회였다. 2016년에는 5월 7일 8면, 8일 24면, 9일 12면, 10일 8면이었다.

제7차 당대회 개최 결정과정도 미스터리다. 제6차 당대회는 당창건 35주년인 1980년에 열렸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려면 당창건 70주년인 2015년이 더 합리적이다. 더구나 경제문제가 해결된 뒤에 당대회를 개최하라는 김일성의 유훈을 고려하면, 현 경제상황은 마땅치 않다. 작년 당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로 주민들이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동원 여건이 그리 좋지 않고 국제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시기이다. 5월 초는 모내기 등 농촌 동원시기이기도 하다. 참고로 제4차는 9월, 제5차는 11월, 제6차는 10월에 개최되었다. 김정운의 즉흥적 결정이었거나 아니면 핵 고도화 프로그램이 당대회 개최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군사회담 등 남북대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NPT의무 이행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촉발시켜 한국의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제재·협상 병행론을 활용하여 국제공조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제고와 한미·한중·한미중 간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상황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